

기획 - 총학생회 사업 성과 점검



2월 1일 총학생회가 자율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팀플’ 관련 사업에 집중, 학생회 신뢰회복은 ‘지지부진’

#

‘취향저격’과 ‘KHU&KHU’ 선본이 48대 총학생회(총학)로서 일한지 10개월째다. 현재 49대 총학생회 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이 시작됐고, 사실상 48대 총학의 임기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우리신문은 총학의 사업성과를 ▲학생복지 ▲대학행정 감시 ▲학생자치 강화 측면에서 살펴봤다.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교통비·자취지원금 1억 신설’ 공약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재원마련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가 컸다. 선거운동 기간에 ‘취향저격’ 선본은 강의실 방문PT 당시 ‘학교기업 KMC로부터 학교가 받기로 약속된 돈을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변 바 있다. 그러나 기부금 형식으로 전입되는 KMC 전입금은 매년 액수가 일정치 않은데다, 전입되지 않는 해도 있다. 또한 법인 산하 업체인 KMC가 장학지원을 위해 1억을 학교에 추가 제공하기 어려울 뿐더러, KMC 전입금은 특수목적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KMC 전입금으로 교통비·자취지원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대학에 장학금을 더 요구하겠다’는 의미와 같다. 장학금을 증액하겠다는 공약 이행의 어려움을 가리기 위해 KMC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KMC는 경희학원의 자회사일 뿐 학교기업이 아니다. 해당 공약은 지켜지지 못할 전망이다.

학생복지 부문

장학금 유치 공약 실패  
‘팀플’ 관련 공약 이행에 집중

‘자취방거래 게시판 신설’ 공약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총학은 ‘자주경희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자취방 매물정보, 복비시세 정보를 공유하고 계약서 쓰는 법, 계약시 유의사항을 공시하는 ‘경희인을 위한 방KHU하기’ 게시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는 홈페이지 어디서도 해당 게시판을 찾아볼 수 없는데, 지난 5월 총학이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트래픽 제한으로 잠시 닫아둔 상태’다. 10월인 현재까지도 해당 게시판을 찾아볼 수 없다.

학생복지 사업 관련 공약이행을 통해 보인 성과는 ▲통학버스 인천·부천노선 운행시작 ▲학생회관 세미나실 ‘두런두런’ 개실 ▲팀플 물품대여 및 ppt강연 개최 ▲대동제 부스 다양화다. 선거 당시 크게 주목받았던 팀플 관련 학사개편 공약은 이행과정 중에 있다. 해당 공약은 ▲강의계획서에 팀플여부 표시 의무화 ▲팀플 과제 중간평가제 도입 ▲팀플 강의 절대평가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총학은 지난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사지원과 협의 중이다. 학사지원과 측은 “강의 계획서 양식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논의



서울캠퍼스 정주희(사학 2012·왼쪽) 회장, 단재민(미술학 2010) 부회장

중에 있는 ▲팀플 과제 중간평가제 도입 ▲팀플 강의 절대평가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대학 행정감시 부문

학생들 지지 이끌어내지 못해

총학의 행정감시 기능은 총학이 대학행정에 학생참여 주제로 유일하게 인정받는 기구인 이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 특히 우리대학이 프라임 사업(PRIME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참가, 경희미래창조소설 신설 등 여러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올해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총학은 학생여론을 모으는데 번번이 실패하며 학교와의 의견조율에서 한계를 보였다.

교육부가 프라임 사업 시행안을 발표한 지난해 10월부터 우리대학이 사업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올해 4월까지, 대학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특히 철저히 눈 밖에서 진행되는 ‘학교구조 재편’ 계획에 관련학과 학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올해가 돼서야 총학은 총장 면담을 요청하고, 대학본부에 정보공개 협조공문을 공개발송하며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렵게 얻은 발언권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는데, 이는 학생여론을 효과적으로 모으는데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총학의 힘은 12,000명 학생의 교육권에서 나온다. 학생들의 지지가 곧 총학의 협상능력을 결정한다. 이를 알고 있는 총학은 학생회장 1인 시위, 강의실방문PT 등을 진행해 학생여론을 주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규모 설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문지 상단에 프라임 반대 주장의 근거를 자극적으로 실어 배포해 편향성

문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논란은 프라임 사업 반대 근거의 신뢰도를 오히려 떨어뜨렸고 끝내 설문은 중지됐다. 이후 총학은 정책투표를 제외한 어떤 여론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사업기획안이 교육부에 제출된 이후에서야 진행된 정책투표에 학생들은 ‘참여인원 미달’로 답했고, 끝내 프라임 사업신청은 대학본부의 계획대로 진행됐다.

프라임 사업의 사례 뿐 아니라, 자율예산 정상화운동 과정에서도 같은 이유 탓인지 4년간 삭감된 자율운영예산 84억(서울캠퍼스 기준) 중 ‘특별교부금’이란 이름으로 1억 원만이 보전되는 데 그쳤다. 경희미래창조소설 신설계획도 대학혁신위원회 유정완 학장의 사과만을 받아냈을 뿐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처럼 총학은 대학본부와의 힘겨루기에서 시종일관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푸른솔 카페집회에 대해 대학본부 측에 해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현재까지도 이는 유효하다. 입학금 폐지·반환운동은 그 당위성을 떠나, 학생여론 모집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학생자치 강화 부문

자금이용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돼

지난해 전임 47대 총학은 학생회 신뢰도 재고방안으로 ‘학생회계감사 확대시행안’을 내놓았다. 해당 안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 등 자치회비 사용주체들이 정기적으로 학생감사단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전학대회 성사실패로 회계감사 관련 회칙개정안 발의가 불가능해지자, 47대 총학은 학생자치기구 회계관리양식과 감사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 총학

에 전달했다. 2015년 진행된 ‘자치회비사용 신뢰도 조사’에서 85.6%의 학생이 ‘단과대학 학생회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여 ‘자치회비 결산에 대한 회칙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는(2016.03.21 확대운영위원회) 현 총학에게서 회칙개정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전임 총학에게 전달받은 회계관리 양식 등을 각 자치기구에 전달했을 뿐이다. 지난 4일 무산된 전학대회가 특별한건 없이 소집됐던 것으로 볼 때, 총학의 회칙개정 계획은 전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임 총학이 회칙개정안까지 마련해, 최종 의결만을 남기고 있던 ‘학생회계감사 확대시행안’을 무산시킨 것이다.

‘체대 오토비 38만 원 논란’, ‘전임 문과대학 회장들 금품수수 의혹’ 등의 사건을 통해 학생들 사이에 자치기구 회계에 대한 의구심이 나날이 커져가는 중인 데다, 문과대학 의혹에 총학 정주희(사학 2012) 회장이 직접 관련된 상황이다.

또한 ‘단과대학 학생회의 교비사용과 달리 총학의 교비사용이 의결기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다’는 정경대학 이동진(경제학 2012) 회장의 주장에 따라 총학의 교비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총학이 스스로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라도 신뢰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한 차례의 전학대회도 열지 못한 채 대안마련이 없는 등 학생자치 부문에선 오히려 퇴보했다. 회칙개정 권한이 전학대회에 있는 이상, 연달아 무산되고 있는 전학대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총학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정 회장 본인이 ‘학생자치기구 선거에서 선관위의 권한남용 등으로 선거가 파행에 이르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회칙을 다방면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의결기구 정상화가 시급하다.

전체적으로 총학은 세미나실 마련, ppt강연, 강의계획서 개편 등을 통해 팀플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꾸렸으나, 대학본부와의 협상에서 무력했고 학생자치 발전을 이루는데 실패했다. 이러한 실패들은 다음 달 결정될 후임에게 악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총학은 현재 추진 중인 입학금 반환운동을 통해 학생여론 수렴의 좋은 선례를 마련하고, 전학대회 개최실패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